

MB정부 대형국책사업 영·호남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

노골적 차별... 국가 균형발전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인사, 정책에 이어 대형 국책사업까지 영남 편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불러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 오하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편중된 국책사업=영남과 호남의 대형 국책사업 규모는 '15조원 대 3조원'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건설에서도 영남과 호남은 '47 대 12'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실행되거나 실행이 예정된 국책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영남지역 사업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남에 두 곳(대경권, 동남권)의 경제권을 두고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을 한 곳으로 묶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예고됐다는 평가다.

당시 호남권의 선도 사업은 기존의 계속사업에 그친데 반해 대경권과 동남권은 주로 신규 사업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 작용=영남에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이 편중된 점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영남이 이명박 정부의 견고한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인사와 정책에 이어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 '영남 밀어주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영남의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예비타

■호남지역 대형 국책사업 현황 (2008~2011.7월) (사업비:억원)

Table with 5 columns: B/C 1.0 이하, B/C 1.0 이상, 사업명, 총사업비, B/C, AHP. Lists various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roads and bridges.

■영남지역 대형 국책사업 현황 (2008~2011.7월) (사업비:억원)

Table with 5 columns: B/C 1.0 이하, B/C 1.0 이상, 사업명, 총사업비, B/C, AHP. Lists various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roads, bridges, and public facilities.

(자료: 조영태·김정 의원실 제공)

○예비타당성조사=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B/C로 표기)이 1 이상이거나 지역 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등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종합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위계적 분석방법) 분석결과, 사업시행지수가 0.5이상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타당성 없는사업 23건이나 영남몰아주기 인사·정책이어 경제 고립... 호남 위기 심화

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이 1을 밑돌았음에도 실행이 결정되거나 실시설계 등에 착수된 것은 점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형님 예산' 논란 등 한나라당이 지난 3년 동안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대형 국책사업의 영남 편중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영남 밀어주기를 막지 못한 지역 정치권의 한계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재도 '호남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 경제적 고립=대형 국책사업의 영남 편중으로 호남의 경제적 미래는 크게 어두워진 상황이다.

대형 국책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영남에는 상당 기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호남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영호남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첨단산업 관련 대형 국책사업이 영남에 집중되면서 하드웨어(SOC)에 이어 소프트웨어(첨단산업)에서도 영호남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1대회 지방채 발행 핫 이슈

■국감쟁점 전남도

4일 열리는 전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대회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국감 자료는 모두 100여쪽 분량 450여건에 달한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5명의 의원은 모두 F1 대회와 지방채 발행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시·군 등 지역민 부채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F1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지방채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김태원·유정복 의원은 이미 F1 감사원 감사결과 및 5년간 부채현황, F1 경주장을 포함한 삼포지구 개발과

런 손익 및 이익배당금 현황, F1 대회 국비 미확보시 대책 등의 자료를 통해 F1 대회로 지역민 부담이 커지는데 따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도의 여수세계박람회와 F1 대회 등 지역 대형 현안 사업이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추진력을 잃고 있는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전남도와 전남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및 박람회장 건설현장을 둘러본다. 또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여수관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고위간부 국감 전날 골프

전남도 고위 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골프를 쳐 구수수에 올랐다.

전남도청 A국장(3급)은 3일 오전 7시10분부터 화순군 모골프장에서 고등학교 후배 3명과 골프 라운딩을 했다. 개천절인 이날 해당 국 일부 직원은 400여건에 달하는 국감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날 골프 라운딩은 수감기관 고위 간부의 행태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국장은 "새벽에 후배들과 골프를 친 뒤 오후부터 출근, 국감 자료 제출 및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는 등 상황은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무



제발, 소통이 되는 말씀을 좀...

사막화를 막기위한 전 세계인의 약속,

UNCCD COP 10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개최

201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011.10.13 ~ 10.19 창원시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UNCCD 홍보대사 이보영

검색창 UNCCD

2011.10.10 ~ 10.21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CECO)

